

박영수 특검 “청와대 내부 압수수색 필요”

“현재 자료 제출 요구 법리 검토 중... 법 어겨가면서 줄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박영수 특별검사팀(64·10기)이 청와대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 관저,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오전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부분 압수수색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과거)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거부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혹시 법리가 가능한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를 직접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

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29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청와대가 거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는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앞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누차, 다 알고 있으니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짧게 답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재는 전날 특검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을 확보하지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현재가 요구한 수사 기록 자체를 특검과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다”며 “두 기관이 가지고 있어 어디서 제출하는지, 현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한다고 법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법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특정 돼 있지 않다. 그냥 자료라고 포괄적으로만 돼 있다”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보내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할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을 19일께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 검토 작업과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국가정보원의 압송 때 대법원장 사할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다수 의혹이 추가 폭로되고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사록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의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언론을 통해 추가된 제기된 의혹 역시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누구든 조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당, 18년만에 지지율 40% 회복

TK 포함 전지역 1위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40%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23%)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5%p 오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도가 40%를 넘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37%를 넘어서 적이 최고치였다.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2%p 상승한 15%, 국민의당은 1%p 하락한 12%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당이 4%p 하락한 3%, 기타 1%, 없음/의견유보 2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TK에서 민주당은 32%의 지지율을 기록해 25%의 지지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을 7%p 차이로 앞섰다. 광주·전라에서도 민주당은 53%의 지지율을 기록, 22%의 국민의당과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2030세대에서 50%가 넘는 지지율(19~29세 57%, 30대 56%)을 기록했으며, 40대에서 49%, 50대에서 29%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16%를 기록해 30%의 지지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에 뒤진 2위를 차지했다.

갤럽은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상승은 특히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지역, 20대와 30대에서 두드러졌다”며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집권적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친박 지도부 일괄 사퇴 선언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지난 16일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우 최연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적 사퇴를 선언했다.

이정현 대표는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조원진 이장우 최연혜 유창수 박완수 최고위원도 저와 함께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우택 원내대표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모든 체제를 정 원내대표 체제로 바꿔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의 가치, 사랑하는 국민과 280만 당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며 “정 원내대표도 우리 지도부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내 단합과 보수 가치를 수호하고 내년 대선과 개헌을 포함한 중대한 정치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분의 아גיע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용서 구한다”며 “도와 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 방향으로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시킨 후 첫 방문지로 전북을 찾았다.

손학규, 전북 찾아 '7공화국 건설' 발걸음 가속화

출범 후 첫 방문... “전북민 열망 동력 삼아 국민주권개혁회의 전국화 나서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 방향으로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시킨 후 첫 방문지로 전북을 찾아 7공화국 건설을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했다.

손 전 대표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의 열망을 동력 삼아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전국화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국민과 역사의 명령은 낡은 틀, 낡은 제도,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라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여는 참된 개혁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단순히 권력구조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권세력 해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남북관계 복원 등 개혁세력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를 끝으로 제왕적·패악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면서 “치역권치를 줄이고 국민의 뜻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호헌세력은 시간을 핑계하지만 시간은 충분하다”며 “이미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애국심을 앞세우면 시간이나 방법은 국민의 뜻을 모아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정당 대부분이 격랑에 휩쓸려 있어 새해에는 국내정치 구도에 빅뱅이 예상된다”면서 “국민주권개혁회의에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면 여야는 물론 건강한 진보와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국민적 정치결사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촛불심심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염원을 실천할 새 항아리”라면서 “앞으로의 정치일

정은 국민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7공화국을 열어가는 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반 총장도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귀국하면 반 총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세력에는 민주당이나 국민 의당 뿐 아니라 정치적 소신이 있는 새누리당의 많은 사람에게도 같이 열려 있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신년 초가 되면 기존 정당들의 분열과 분화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범함으로써 우리 정치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지역 유력인사와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 스타텐터에서 ‘강진일가-나의 목민심서’ 출판기념회인 북 콘서트를 가졌다. /인재용 기자

국조특위, 청와대 현장조사 '무산'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경호실이 이를 강력 저지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는 경호실의 적극적인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속기사를 입장시켜 공식 기록화는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대통령 경호실을 회의실로 제공하라는 문건은 수용 못하겠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말은 청와대 경내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진입하는 부분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뜻’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박종철 경호실장은 청와대 경내에서 이뤄져야 할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이 명확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일단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이후 재차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재차 추진할 현장조사 범위에 청와대 경호실뿐만 아니라 부속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실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위는 이날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른바 ‘보안 손님’ 신분으로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 출입한 최순실의 무단출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청와대 출입 전산기록 유무, ‘보안 손님’ 출입날짜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뉴시스

정우택, 7표차로 신승... 친박계 계속 장악

전체 119표 중 62표 얻어 새 원내대표 선출해

지난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정우택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이현재 정책위의장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체 119표 중 62표를 얻어 새 원내대표단에 선출됐다. 비박계 후보인 나경원-김세연 조는 55표를 얻었고, 기권은 2표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박상 발표가 되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제가 이 결실을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막막함을 느낀다”며 “정말 어려운 시국이다. 저는 여러

분과 함께라면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 보인다”며 “국민들이 다시 박수 보내주시고 내년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겨 나가면서 정국이 빨리 수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개헌정국을 이끌어서

내년에 진보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며 “지금 생각나는 말은 통치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흩어지지 마시다. 또 우리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신임 정책위의장은 “성난 촛불 민심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전부 머슴처럼 모시면서 아까 약속드린 내용들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보수 정책정당이 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좌파세력이 집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안호영 의원, 21일 'KTX 김제역 이전' 토론회

KTX 김제역 이전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혁신역 설립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국회 더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장)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진봉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성주 군장대 초빙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은주원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장, 김정동 법무법인 백제 대표변호사,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임승규 국토부 철도건설과, 안호원 코레일 CRM부장, 박진용 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안중범·유정복 박 대통령 심기보전에 1천억 날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차적으로 평가되는 두바이투자청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님에도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강행해 1,000억원대 손실을 봤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것이 국정농단,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능력이 안 되는 투자자를 두바이 국부펀드로 속여가며 사업을 추진한 배정은 안중범, 유정복이 박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심기 보전에 들인 비용만 1,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유정복 시장이 누구냐. ‘박근혜의 비서실장’, ‘진박 중의 진박’이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힘있는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인천시장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 후 결성된 새누리당 내 진박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이 (유 시장의) 한결 같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특검이 조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유 시장 역시 특검 수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최순실이 전방위적 국정농단과 함께 대통령의 정상외교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속 중인 최순실, 안 전 수석과 유 시장 등 검단스마트시티 사기극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4조원대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날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실제 투자유체가 두바이투자청이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작은 두바이스마트시티였고, 안 전 수석이 이를 보고받고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결국 사업 무산으로 1,000억원대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안 전 수석이 2014년 8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박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도 정상외교에 관여한 만큼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건 역시 최순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시스